

# 정기국회 앞둔 여야, 국조·검수원복·前 정권 수사 정면 충돌

〈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 결산심사부터 대치 불가피 운영위 대통령 관저 공사·사적 채용, 법사위 시행령 충돌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전(前) 정권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입장을 달리하며, 당장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만큼 시작 전부터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한 모습이다. 당장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엔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꺼내 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이런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를 현실화하긴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대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정부·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과반 의석수를 바탕으로 분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향후 대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다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부·여당 발목잡기에만 치중한 모습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연호할 전망이다.

22~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일전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

과시킨 검수원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에도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한 장관에 야당의 집중공세가 쏟아질 경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선 '탈북어민 복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힘내세요”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공식 팬클럽 회원들이 머리 위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 을 확장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연합뉴스

##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 이내 시위 금지

### 집회·시위 과정 모의 권총 등장 대통령 경호처, 경호 강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 호가 강화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태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 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 차원의 행보 로도 읽힌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 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 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12월 전대... 1월 말~2월 새 지도부 뽑힐 것”

주호영 “윤대통령, 검찰 출신 많이 쓴단 비판 돌아봤으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와 관련, “연말인 12월경에 전당 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 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대 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 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첫째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 방어도 해야 하고 필요법안 통과도 시키고 국정감사, 예산 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 여당이 전당 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와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권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 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 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가처분 결과가 기각 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가처분 결과 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

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

이어 ‘당 내용 수습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 입지만, 대통령 도 상처가 많죠”라며 “가급적 이 문제를 재판으로 끝까지 공격하는 걸로 두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간접 대화도 하고 있고, 여건이 되면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 “다음 기자회견을 할 때는 객관 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를 좀 냈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인사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강제복송·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탈북어민 강제 복송’·‘월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강제 복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 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 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 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 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 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대 통령기록관에 먼저 도착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 혹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착수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 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 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